

정신대 관련 글모음

1. 유엔에서 여성인권운동으로 제기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츠부라야 교코
3.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Chen Yi-Chen
4.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재일동포 입장에서; 김영희
5.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은희(정대협 기획위원장)
6. 왜 민간모금구상에 반대하는가; 이시가와 이즈코
7. 민간위로금을 왜 반대하는가; 김경희(정대협 총무)
8. 일본정부의 '위로금'모금 계획에 대하여; Nelia Sancho
9. 타이완의 일본군 위안부들은 정의를 원한다; Yu-Fang Shiau
10. 일본군 위안부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위해 조직하다; 넬리아 산초
1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 줄리아포라스(전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 일본군 위안소 정책과 위안소 경영사; 니시노 루미코
13. 일본에 있어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전의 경위와 PCA의 유효성에 대하여; 아이타 니 구니오
14. PCA의 운동적 의미와 정대협의 향후 계획; 지은희(정대협 PCA특별위원장)
15. 한일협정과 PCA; 배금자 변호사
16.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소고; 박원순 변호사
17. 일본에서의 지원 활동에 관하여; 이시가와 이즈코
18. 일본정부의 중재수락에 관한 정세와 앞으로의 전망; 오자키 준리
19. 정대협 PCA 한일변호인단 공동선언문(안)

참여연대 인권 자료		
등록일	등록기관	사건번호
1.9	(-)	
95	-1	9

31

유엔에서 여성인권운동으로 제기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윤 미 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I. 정대협 활동의 시작

1970-80년대의 국내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여성운동단체들은 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일제 식민지 지배와 분단으로 인해 민족수난사 속에서 고통당한 여성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특별히 외화획득의 명분하에 정부에 의해 조장된 관광산업정책으로 인해 자행되는 한국여성에 대한 성폭력문제에 직면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국여성운동의 한 과제로 삼게 되었다.

처음에 국내에서 정신대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1988년 4월,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여성과 관광문화"라는 국제세미나에서였다. 그리고 1990년 18개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정대협을 발족시키면서 일본군 '위안부' 해결운동은 급속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II. 민족문제, 여성문제에서 인권운동으로 제기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대협의 활동이 시작된지 오는 11월 16일로 만 4년이 된다. 아시아지역에서 운동조직이 다른 나라 여성들, 특히 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의 여성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비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거의 유일하게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10만-20만으로 추산되는 피해자의 80-90% 이상이 조선여성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여성의 문제, 민족문제로 제기된 이 정신대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은 아시아피해국과의 연대운동과정에서 그리고 국제적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인권운동으로 전개되게 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구체적으로 인도에 반한 죄이며 전쟁범죄라는 인권개념으로 나아가게 된 것도 유엔에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서부터이다.

III. 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유엔에 가지고 갔나?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진지하고 솔직한 자세로 임했다라면 우리는 이 문제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정부의 태도로 봤을 때에는 도저히 정신대문제를 일본정부 스스로에게 맡길수가 없었다.

1990년 6월 일본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사회당의 모토오카 쇼지의원이 "강제연행된 종군위안부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자, 노동성관리가 "종군위안부는 정부가 한 일이 아니었고, 민간업자들이 한 일이기때문에 조사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에 대해 한국의 여성단체들이 항의하고 서한을 보냈지만 일본정부측 태도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단지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때 한국국회에서 과거사에 대해 사과의 발언을 했을뿐이었다.

이렇게 일본정부와의 대결에서 별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정대협은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방법을 찾아 1992년 초에 유엔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IV. 유엔에서의 일본군'위안부'문제

1. 처음으로 제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직접 유엔에 정신대문제를 제기한 것은 1992년 2월이었다. 처음에는 유엔의 어느 기구에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효재 공동대표가 미국의 유엔 본부를 방문하여 여성문제, 인권문제담당자들과 접촉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정신대문제의 개요에 대한 설명문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것이 그 시작이었다. 유엔본부에서 이대표가 접촉한 여성문제 담당자가 여성지위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그에게로부터 인권위원회에 제기하라는 조언을 비로서 들었고, 이후 유엔 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알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대표가 귀국한 이후 정대협은 곧바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발언권을 가진 세계 NGO단체 대표들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개요에 대한 설명문과 함께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발언 및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는 운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편지는 실제로 큰 호응을 얻기 시작하였고, 몇개의 여성운동 NGO에서 편지와 함께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정대협의 유엔활동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대협에서 직접 유엔에 정신대문제를 제기하기 바로 이전에 이 문제가 제네바의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기되어 있었다. 정신대문제를 알게되었던 일본인 변호사 도즈카 에츠로가 1992년 2월의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였고, 그 후 5월에 열린 인권소위원회 산하의 [현대형노예제 실무회의]에도 참석하여 정신대문제의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해 놓았던 상태였다.

2. 본격적인 유엔활동

- 유엔인권소위원회의 결정 -

1) 이런 기반위에서 정대협은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의 지원을 얻어 1992년 8월부터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가하게 되었다. 첫 회의에는 이효재 대표, 신혜수 국제협력위원장, 정진성 조사연구위원장, 황금주 정신대할머니 이렇게 4명이 참석하여 소위원회에서 2회 공식 발언하고, 유엔주제 언론과의 회견, 민간단체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NGO브리핑에서 정신대할머니의 증언과 함께 정대협의 운동과 우리의 요구를 밝히고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 설명회에는 조총련 단체인 [조선인 강제연행진상조사단]의 대표들이같이 참석하여 강제연행에 관한 사실들을 폭로하였다.

이때 유엔인권소위원회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일본군의 정신대가 된 아시아 - 주로 한국-의 여성들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중대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의 피해자를 위한 원상회복, 배상 및 재활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반 보벤)'에게 주도록 요청하였다.

그 후 정대협은 같은해 12월 11-13일에 유엔인권소위원회 배상문제 특별보고관인 반보벤 교수와 도즈카 에츠로 변호사를 한국에 초청하여 "국제인권협약과 정신대문제"라는 세미나를 개최하므로 정신대문제를 국제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었다.

이후 정대협은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마다 참석하여 정신대문제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되는데 1993년 2월 유엔 인권위원회에 신혜수 국제협력위원장이 참석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그리고 책임자처벌을 요구했다.

2) 1993년 3월 방콕의 세계인권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준비회의에 이효재,

정진성씨가 참석하여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서명을 받는 등 정신대문제를 알 려나갔다.

3) 1993년 5월 현대형노예제 실무회의는 전쟁중의 여성의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강제노동, 즉 2차 대전중 일본에 의한 정신대와 강제노동자로 일했던 남녀의 상황에 대해 그 정보를 인권 소위와 배상문제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하도록 결정하였다.

4) 그리고 19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이효재, 신혜수, 정진정, 김복동, 윤미향이 참 석하였는데, 이 대회를 준비하고, 참석하는 가운데 정대협은 아시아여성인권단체와의 연대와 세 계여성인권운동단체들과의 연대활동으로 정신대운동을 여성인권운동으로써 한국과 아시아를 뛰 어넘어 전세계의 여성들과 연대하는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 회의의 결의문 채택에 있어 서도 일본정부가 정신대문제와 관련한 항목에서 일본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집단강간, 성노 예... 현재 진행중인 폭력'으로 통과시키고자 로비하였지만 결국은 현재를 모든으로 바꾸기 위 한 우리의 노력이 통과되어 '...집단강간, 성노예.. 이러한 모든 폭력'으로 통과되어 일본군'위안 부'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의 지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5) 1993년 8월,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신혜수 국제협력위원장이 참석하여 일본군' 위안부' 특별 보고관 임명건으로 노력을 기울였는데, 마침 보스니아 집단 강간사태와 맞물려 국제적인 호응 을 얻게되었다. 이 회의에서 정신대문제를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내전을 포함하여 전쟁중에 가해지는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노예제와 유사한 행위등의 상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담 당할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유엔인권소위는 특별보고관에 린다 차베즈를 임명하였다. 특별보고관에게 주어진 중요임무 중의 하나는 제 2차 세계대전중의 일본에 의한 성노예에 관해 관련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분석과 함께 결론과 권고사항들을 제시하는 일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정부가 현대형노예제 실무회의에서 유엔은 유엔이 창설되기 이전에 일 어난 일에 대해 논의할 수 없으며 모든 배상은 북한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피해국들과 일본사이 에 체결된 조약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6) 그러나 1994년 2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8월의 유엔인권소위원회 결의사항인 특별보고관 임명에 대한 승인을 하는데 있어서 미국이 자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를 저지하기 위해 서 인권소위원회의 조사내용이 너무 많고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반대하자 승인을 연기하고 말았 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임명건이 통과되어 스리랑카의 쿠마라스와미가 임명되어 1차 보고서(총체적 보고서)를 95년 2월, 2차 보고서는 96년 2월, 3차 보고서는 97년 2 월에 인권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있다. 쿠마라스와미의 보고서 계획에 의하면 1차 보고서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도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의 한 분야로 보고할 예정이고, 3차 보고서의 국가 에 의한 폭력 항목에서 역시 일본군'위안부'를 다룰 계획이다. 현재 정대협은 3차 보고서를 2 차 보고서인 가정내 폭력문제와 순서를 바꾸어 보고할 수 있도록 설득할 예정이다.

7) 그리고 5월의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에서는 "일본정부는 정대협과 함께 국제중재재판소 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하는 결의를 하였고, 6월의 자카르타 각료회의에서 는 일본의 갖은 방법을 동원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여성발전을 위한 행동 계획]을 채택했는데 그 내용은 "정부는 전쟁중에 체계적인 강간을 비난하고 처벌을 요구했을때 응해야 한다."이다.

8) 금년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는 특별보고관인 린다 차베즈가 재정적 부담을 초래함이 없이

제 47차 인권소위에 전쟁중의 노예제에 대한 Working Paper를 제출하도록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정부, 정부간 기구, 민간단체에게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다.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금년 8월의 유엔인권소위는 "전쟁중에 행해진 여성의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해 접수한 정보를 인권침해 범죄자 불처벌문제에 대한 특별 보고관에게 보낼 것을 결정하고, 특별보고관들이 실무자들이 제 49차 회기중에 접수한 이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고려할 것을 권고함"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현재, 남북한 정부는 린다 차베즈를 공식초청하여 내년 3월중에 남북한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다.

V. 성과

1992년부터 정대협이 국제적 운동을 전개해 오면서 이룩한 몇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은 무엇보다도 군국주의하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희생당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으며 군국주의, 전쟁, 가부장제, 집단강간 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를 촉발시켰다. 많은 석사, 박사논문이 작성중에 있으며, 전쟁과 강간 등의 제목으로 국제세미나 등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 운동은 평화운동과도 연결되었다.

둘째로 여성인권운동이 목표한대로 유엔 등 인권관련 국제기구와 단체로 하여금 여성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고취시키고 인권의 개념을 넓히는 성과를 낳았다. 전쟁중에 여성이 겪게 되는 집단강간, 성노예의 문제를 심각한 여성인권문제로 인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구체적으로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비엔나선언과 행동프로그램, 그리고 자카르타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여성발전을 위한 행동계획] 등 유엔의 공식문서에 이를 포함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유엔 인권위원회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조사되고, 이 조사내용은 세종류의 보고서에 기록될 것이다.

VI. 앞으로 남아 있는 일

1) 북경여성대회

95년 8월 30-9월 8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 4차 세계여성대회와 NGO 포럼에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기하기 위해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세계인권대회에서 개최되었던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제판]과 비슷한 규모와 내용의 행사에 참여하는 이외에 아시아국가, 또는 보스니아의여성들과 연대하여 [전쟁중의 성노예에 관한 여성 포럼]등을 며칠에 걸쳐 개최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2)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 국제연대운동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민족주의가 갖는 민족, 국가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여성들의 연대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으로 실질적 힘을 갖지 못한 여성운동은 구체적 해결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큰 힘이 없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운동을 하지 않는 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는 단지 도덕적 지원이나 세계 각곳에서 개최되는 국제심포지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에 있어서 남성들의 부대인 정치영역, 경제부문에 대한 여성운동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문이 있다면 이는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건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이에 관련
상적
범

일본이 세계평화를 의논하는 국제적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아시아 여성들에게 행한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 범죄를 청산하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이다.

이를 위한 국제적 서명운동이나 일본상품불매운동, 여론조성운동을 대규모로 하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운동의 국제적 연대의 힘을 증명해 낼 수 있다면, 각국의 정부가 국가의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일본의 가입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에 일정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판단아래 현재 정대협은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 서명운동은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12월 초까지 수거하여 12월 이내에 각 유엔가입국 외무성과 유엔에 보낼 계획이다.

3)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정대협이 유엔기구나 별도로 국제사회에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곳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중재재판소이다. 이 재판소는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상대방 국가가 응해야 PCA에 간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고자 한다. 일본정부가 불응하면 불응하는대로 그것을 또한 이용하여 국제캠페인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서 정신대문제와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PCA를 성공시키기 위한 연락회를 조직하여 활동중에 있고, 일본변호인들 20여명과, 한국에 10여명의 변호인단이 구성되어 준비중에 있다. 지난 9월 15일에는 제소하기로 결정한 피해자 할머니들과 정대협, 그리고 한국변호인단 대표로 배금자 변호사가 함께 방일하여 일본민간단체들과 변호인단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PCA를 성공시키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오는 11월 27-9일까지는 서울에서 한.일 변호인단과 시민단체들의 PCA심포지움이 있을 계획이다.

VII. 결론에 대신하여

한국의 운동이 운동초기의 민족문제, 여성문제라는 총체적 인식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인도에 반한죄' 또는 '전쟁범죄'라는 인권에 대한 개념으로 나아가게 된 것은 국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상의 용어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엔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의 개념을 이용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일반적인 여성문제의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인권유린의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전쟁과 강간' 또는 '전쟁중에 여성에게 가해지는 인권유린'이라는 보다 보편적인, 한국과 아시아를 뛰어넘어 전세계의 여성들과 연대하게 되는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연대운동 일본정부에 치명적인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광복 50주년인 내년에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국회결의 사죄, 국제법적 배상, 책임자처벌 등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 국내인권단체들의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원처(서울시 중구 남산로 15) 유엔인권위원회(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인권위원회(유엔 인권이사회)

인권 자료실		
구분	분류기호	자료번호
	B12-1	105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69

츠부라야 교코(円谷恭子)

I. 가해국의 시민으로서

가해국 일본의 여성으로서 아픔과 긴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향한 운동을 통해 우리들은 새삼스럽게 지금까지 자신들이 받아온 역사교육의 잘못과, 일본 사회가 걸어온 길의 오류를 재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개인의 인격형성을 왜곡하고, 나아가 미래 사회 형성도 왜곡하게 됨을 자각하여 이것의 수정없이는 문제를 위한 운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정부가 공식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를 고치기 위해 빠뜨려서는 안될 요소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은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피해자들의 절규를 비통한 마음으로 듣고, 잔혹한 사건에 떨면서, 국가 권력에 의한 여성의 인권침해에 분노합니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의 회복을 위해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개인배상,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꼭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후 40여년을 지나, 피해자 개개인의 고발이 나와서야, 여기에 겨우 다다른 것을 변변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문제 해결을 향해서 여러분과 연대하고자, 금후의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대체안을 계속 철회시키다

현 무라야마 내각이 강경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민간모금」 구상에 대해서는, 어제, 일본의 보고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정부는 미야자와 수상의 형식적인 사죄이후에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않고, 「사죄와 반성의 마음」에서 나온 구체적인 대책으로 작년 6월이래, 「청소년 교류기금」, 「아시아 교류센터」, 「아시아 여성 자립센터」 등으로 이 문제의 해결과 전혀 관계가 없는 대체안을 제시하여 문제를 종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철회시켜 공식적인 책임의 이행으로 끌고갈 결의입니다. 대체안의 문제성을 여론에 호소하여 정부 및 관계기관에 압력을 가하는 일을 착실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작년 7월,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로서 「아시아 교류센터」 설립안이 제시되었을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행동 네트워크」가 주체가 되어 뉴스를 접한 직후 행동을 개시하여 긴급히 약 2만명의 서명을 모아서 정부에 대해 이 안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2만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많은 수는 아니지만, 현재 「민간모금」 반대의 소리가 일본에서는 아직 큰 세력은 아닌 상황에서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격려가 되고, 국회의원이거나 관계기관에 압력을 줄 에너지로도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계속 다루어온 각지의 단체가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호소 및 항의행동을 하고, 이런 행동의 연속이 조금씩

시민 사이에 공감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민간모금」 구상을 억지로 밀고나가는 정부와 이런 움직임에 끝까지 가담하려는 세력은 아직 강력합니다. 앞으로 ICJ의 권고, 또한 일본의 UN 상임이사국 가입을 반대하는 국제여론의 힘을 빌려 일본 국내의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활동 준비를 현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민간모금」 구상을 철회시키는 활동을 강화하고 싶습니다.

국제중재재판의 성공을 향해

끝까지 공식적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의 피해자들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는 상설 중재재판소(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 PCA)에서 국제법에 기초한 해결을 결단한 것을 받아들여, 작년 9월 “국제중재재판을 성공시켜 개인 배상을 실현하는 연락회”(이하 연락회)가 새롭게 발족하였습니다. 도쿄도 내에서 200명 규모의 궐기대회를 하고 피해자 개인들의 결의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대협 대표가 일본측 변호단에게 일본정부와의 「합의서」 체결까지 일을 위임하였습니다.

그 후 정보의 수집, 분석과 연구, 소책자나 통신의 발행, 집회의 개최 등을 거듭하면서 정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락회”에는 일본 국내 47개 민간단체와 349명의 개인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중재재판을 위해 결성된 일본의 변호단은 현재 70명으로, “연락회”와 한국 변호단 38명과 연대하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해왔고, 작년 11월에는 일본 정부에, 「신청서」와 함께 「중재합의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4일, 정부는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회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연락회” 및 변호단은 즉시 회답의 철회와 재고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 운동을 더욱 더 계속하고 강화시킬 생각입니다. 중재재판에 제소할 것을 결심한 피해자들의 승리는 현재 계속 중인 국내 재판과 다른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국가배상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틀림없이 확신합니다. 또한 「위안부」 제도가 처벌되어야 할 국가적 범죄라는 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하기위해 한걸음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역사교육을 고친다

일본정부가 이 문제의 진상을 구명하여 공표하는 것은 일본의 역사교육을 바르게 하는 하나의 창구라고 우리들은 확신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만이 자국 침략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권력지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중이 역사를 개척하기 위해서도 우리들은 이 창구를 열어 확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부에 진상구명을 요구하는 한편, 민간의 힘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을 서로 전해, 검증하는 것을 역사교육을 고치는 한 단계로 의식하고 싶습니다. 그 한걸음 한걸음을 밟아나가면서 역사교육을 바르게 하는 커다란 세력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시민의 의식 변혁을 근본으로

여론의 지지를 정부에 대한 압력으로 보는 것과 동시에 한사람 한사람의 개인으로서 인격형성에 깊이 관계된 측면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성과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고발한 그 사실은 우리들의 정의식을 새삼스럽게 검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검토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중층적으로 꼬여서 해결을 방해하는 구조가 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매매춘을 관용하는 통념, 천황제를 온존시킨 남성중심의 구조가 변하지 않은 이 사회에서 진정으로 여성들이 개인으로서 자립을 확립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민족차별, 여성차별에 둔감한 일본사회에서 진정으로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자기 형성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서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기변혁을 하려는 시민의 일상을 기반으로 사회를 바꾸는 것을 과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 일이야말로 오늘날 아시아 여성의 인신매매를 포함한 매매춘 문제 등, 형태를 바꾼 아시아에 대한 가해, 여성의 「성」 유린을 계속해온 일본사회에서 이 사회를 바꾸는 토양을 확실히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II. 금후 운동의 전개에 대하여

우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현재의 일본의 정치적 상황에 타협하여 정부안에 응하면 안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일부러 강조해야 하는 것은 최근에 정치가가 「민간모금」이 안된다면 백지로 돌린다, 그 이상의 해결책은 없다 등으로 협박성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민간모금」 구상은 더욱 구체화되어, 일본 적십자사를 창구로 4월부터 반년간 구좌를 개설하여, 이를 위해 정부는 선전과 인건비 등으로 5억엔의 예산을, 1월 20일에 소집된 제 132회 국회에서 1995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일본 국내에서 보수파에 의한 국회의 전쟁책임 사죄 결의에 반대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국의 전몰자에 대한 추도와 감사를 주요한 요지로 한 결의가 다수의 현의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중에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은 한 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국가가 계획한 「전몰자 평화기념관」도 후생성은 침략전쟁을 찬미하는 「유아(遺兒)기념관」으로 구상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움직임을 저지하는 것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결코 해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론에 호소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국외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를 호소해서, 일본정부가 국제여론에 귀를 기울이도록 국회의원과 관계기관에도 압력을 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권의 최고 결의기관인 국회에서 전쟁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결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싶습니다.

또한 진상 구명에 대해서도 정부와 별도로 우리들의 손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정부에 대해 발표되지 않았던 자료를 공표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우리들 자신이 조사, 연구 및 청취 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 그 성과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운동에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민간모금」에 반대하는 움직임으로써 “한국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피해자들의 농성이 국회앞에서 있었고, “피해자의 모임”의 할머니들도 일본에 와서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지원하는 시민들의 운동은 저변에서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 신문에 광고를 실는 「의견광고 캠페인」도 조직되어 이미 일본, 한국, 미국의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피해자의 목

소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필리핀, 홍콩, 대만, 네덜란드 등의 신문에도 게재하려고 진행중입니다.

또한 송신도씨를 원고로 하는 재일 재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가 있습니다만, 지금 도쿄 지방재판소에서는 "한국희생자전쟁희생자유족회"에 의한 소송, 필리핀 여성의 소송,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에 의해 억류된 네덜란드 여성의 소송, 시모노세키에서는 관부(關釜)소송, 문옥주씨의 군사우편저금 환부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의 법정투쟁은 일본국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도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있으시피, 작년 7월 UN 인권소위원회, 현대노예제 작업부회에서는 중재재판에 의한 해결의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8월의 인권소위원회에서는 중대한 인권침범자의 불처벌문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도록 권고를 결의하였습니다. 10월 일본에서 열린 동아시아 여성포럼에서도 일본 정부에게 진상구명, 공식적인 사죄, 개인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행동계획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인권소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부회에서 구마라스와미 보고관은 이 문제를 처벌과 배상의 측면에서 검토할 것을 결정하고, 이것이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되면 UN에서 일본으로 조사단이 파견된다는 정보에 우리들은 커다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기회를 맞아 최대한 여론에 호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일본의 외무성이 작년 11월 국제법률가위원회(ICJ)의 보고서를 은폐하여 정치가에게 일체 보여주지 않고, 정치가는 상세한 정보를 갖지 못한채 「민간모금」 구상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이 ICJ의 보고서를 둘러싸고 금후, 도쿄에서 세미나와 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국내 여론의 환기와 함께 일본 정부에 대한 압력을 위한 것입니다.

이 아시아 연대회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커다란 포석이 될 것을 바라며, 또한 8월의 북경회의의 국제적인 무대에서 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커다란 발판이 될 것을 바라며 일본에서의 보고를 마칩니다.

인권 자료실	
등록일	
	106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Chen Yi-Chen

(Taipei Women's Rescur Foundation)

올해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전한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은 이 해가 끝날 때까지 전쟁에 대한 배상요구에 관한 책임을 모두 마무리짓기를 원하고 있다.

타이완의 경우, 배상은 군인으로 끌려간 사람들, 식민지 시기에 보통 시민들이 한 저축과 보험 등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 사이에 그 배상액수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어서 합의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위안부에 대한 배상은 위의 일본정부의 배상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본정부는 위안부 개개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 그 생활비와 의료비용을 상징적으로 배상하는 방식으로서, 공식적인 배상이 아니라 민간기금 프로그램을 결정했다. 공식적인 사죄도 물론 피하려는 의도를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여성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해 왔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로 되어, UN인권위원회에 상정되었고, 헤이그의 국제법정으로 가져가려는 과정을 밟고 있다.

타이완은 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다. UN에 가입하고 있지 못하며 목소리를 높힐 국제적인 지위나 출구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들은 열심히 일해 왔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국제적인 포럼이나 회의에 참석해 왔다.

전 위안부에 대한 배상 전략으로, 나는 군인으로 징발되었던 타이완 시민들이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배상의 과정과 경험을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2차 대전 중 207,000명이 넘는 타이완 남자들이 일본군대와 군속으로 징발되었다. 그 중 25%에 해당하는 53,000명이 죽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 전쟁후 배상법은 일본국적에 한해 적용되었고, 식민지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식민지인들의 배상요구는 일본정부에 의해 거절되었던 것이다.

1977년 8월, 타이완의 인권활동가, 일본인 학자, 공무원, 그리고 일본의 인권단체로 구성된 7명의 그룹은 14명의 타이완 전 군인들이 동경지방법원에 일인당 500만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도록 돕게 되었다. 1992년까지의 15년간 3번의 소송에서 3번 다 패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패소에서 타이완과 일본의 관계자들은 "일본군대에 징발되었던 타이완인들의 배상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조직은 일본의 정치권에서 로비활동을 벌였다. 이 위원회의 고문에는 일본의 국회의원과 다른 정치권 인물도 있었다. 정치적인 로비활동이 법적인 소송과 함께 동시에 진행되어, 1985년 두번째의 패소가 있었을때, 일본국회에 "배상위원회"가 설립되었다. 3년간의 활동이 있는 후 일본국회는 1989년 9월, "전쟁시 죽은 타이완인 유족의 경제적 지원"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12월 중순, 일본국회는 전쟁에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에 대해 일인당 200만엔을 지급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 돈은 다음해 9월, 타이완 적십자사의 협력으로 집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장기적인 로비활동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과 법적인 과정이 정치기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본정부의 “민간기금”안은 위와 같은 경제적 지원을 정부를 대신해서 민간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단체가 정부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일본국내의 여론과 국제적인 여론을 이용하고 국회에 영향을 줄 로비그룹을 만들어서, 정부가 위안부들을 위한 공식적인 배상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올해 내로 배상문제를 종결하고자 하는 일본정부의 희망을 이용해서, 아시아의 여성들이 연대하여 개개인에게 배상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으면, 마침내 일본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수락할 것이다.

일본군'위안부'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조직하다.

넬리아 산초(필리핀 LILA-PILIPINA대표)

배 경

LILA-PILIPINA는 "Liga ng mga Lolang Pilipina"를 지지한다. LiLa-Pilipina는 필리핀의 일본군'위안부'와 강간당한 후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필리핀의 일본군'위안부'들의 인권과 정의 및 배상요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조직이다. 이것은 군위안부들의 정의를 위한 싸움을 지지하는, 필리핀에 있는 여러 조직들과 네트워크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있다.

1992년 7월 13일, Task Force On Filipino Comfort Women이 군위안부들의 정의를 위한 운동을 지지하는 전국적 조직으로 출발했다. TFFCW는 프로그램과 활동을 기획하고,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는 위원들로 구성된 의회의 기능을 했다. 구성 단체는 7에서 15단체로 늘어났다. 전국의 사무국은 AWHRC와 Rayan Women's Dexk로 구성되어 매일의 운동요구를 조정했다. 2년간 AWHRC는 위안부들과 지원 활동자들의 보고와 요구를 받는 회의장을 제공했다.

1994년 5월 16일, TFFCW구성원들과 전 위안부들은 Lila-Pilipina를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직은 전쟁과 갈등상황에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필리핀의 전 위안부들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그것은 희생자 자신들이 소송을 한 첫 케이스이다. 그것은 전쟁범죄와 인권침해범죄에 관한 1907년의 헤이그 조약의 법적 기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LILA-PILIPINA와 TFFCW의 활동

1992년 10월 29일, 일본 변호사들이 위안부들을 면담하는 등 사실규명작업을 벌였다.

1993년 4월, LILA-PILIPINA는 동경의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1994년 7월 31일, LILA-PILIPINA는 일본변호사들의 제 7차 사실규명작업에 힘입어 항의집회와 총회를 했다. 여기서 단합을 위한 춤과 건강수첩 및 의료카드의 배부가 있었다.

1994년 5월 13-16일, LILA-PILIPINA는 기획과 토의를 위한 전국집회를 열었다.

1994년 6월 3일, LILA-PILIPINA 멤버들은 동경지방법원에서 열린 제 4차 필리핀 위안부 재판에 참석했다. 6월 6일에는 한국의 위안부들과 일본의 지지단체 및 개인들과 함께 700여명이 행진을 했다.

1994년 6월 25일, LILA-PILIPINA는 총회와 LOLA의 생일축하연이 열렸다. 많은 축하와 발표가 있었다.

1994년 7월 8일, LILA-PILIPINA는 러미지 세일을 벌였고, 이후 몇번 더 열었다.

LILA-PILIPINA는 또한 UN등의 국제기관에 활발하게 성명서를 내고 있다. LILA는 1994년 9월 13일에 일본의 UN상임이사국 취임반대성명에 참가했다. 1994년 7월 18일, LILA는 무라야마 일본총리에게 다음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 1) 아시아 센터 설립계획을 철회하라. 2) 희생자 개개인에게 충심의 사과를 하고,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전쟁희생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라.

LILA-PILIPINA는 1994년 3월 12일에 동경에서 열린 '여성의 인권에 관한 아시아 법정'에 활발하게 참여했다. 법정이 진행되는 동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강간, 고문, 구금, 강제이동 및 유괴라는 끔찍한 범죄를 비난하는 성명이 나왔다. 이 성명은 일본의 '군위안부정책'을 전쟁범죄라고 규정하고 이것과 모든 다른 군대의 성적 노예화를 비판했다. 이 성명은 인도의 Devadasi제도, 일본의 성노동자 등의 여성의 매매외, 오락과 매춘을 위한 여성노동의 대대적인 수출을 지속시키는 성산업으로 인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동경법정은 또한 다음과 같은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자료수집, 교육/홍보, 로비활동, 희생자 지원.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다음과 같은 제안이 나왔다. ; 철저한 조사와 자료수집, 전범의 재판과 처벌, 희생자에 대한 배상, 공공교육, 국제적 연대의 강화.

1995년 2월, LILA-PILIPINA는 LOLAS의 정의와 배상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필리핀 국가신문에 유료광고를 냈다. 제목은 "우리는 거지가 아니다. ; 위로금은 싫다. 배상하라"였다. 이 광고는 일본정부가 희생자 개개인에게 배상과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문제를 종결지으려는데 대해 LOLAS의 반대를 나타냈다. 이 광고는 이 이슈를 보다 널리 알리고 LOLAS의 요구에 강한 지지를 획득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의 운동이 시작한 이래, 우리 LILA-PILIPINA는 국제법률가협회(ICJ),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 등의 세계인권단체와 많은 아시아여성단체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군위안부 제도는 그 극악한 범죄에 희생된 여성들에게 수치와 불명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가져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위안부들이 고문과 인간적 모욕의 조건 하에서 성적 노동을 제공하면서 매일 강간을 당했다는 것을 안다. 50년간 일본은 이 사실을 숨기려 했다. 50년간 희생자들은 아무 지지자들도 없이 그들의 상처를 품은 채 침묵속에 살아왔다. 그들은 오늘날까지 이 폭력적인 기억과 함께 살고 있다. 그 고통은 아직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정부와 그 사회가 보이지 않게 만든 폭력인 것이다.

우리의 희망은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우리의 운동을 추구하는 것이고, 일본의 법정과 UN을 이용해서 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여성들을 강제동원했고, 이 잔악한 제도를 유지시켰다는 것을 시인하도록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도록 계속 압력을 넣어야만 한다.

우리가 일본의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금전적인 배상을 받으려는 것 뿐 아니라, 세계사회가 이 성노예화를 전쟁범죄임을 알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이 범죄의 희생자들에게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1995년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 4차 세계여성대회를 맞이하여 우리의 활동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우리는 여성단체들을 초대하여 우리가 계획하는 워크샵과 프로젝트에 참가시키려고 한다.

아시아 전체에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 높힐 것이다. 우리의 목소리는 희망과 투쟁의 목소리이다. 우리의 눈은, 객관화와 복종에 기초한 지배의 현 상황과는 다른, 세계를 파악하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눈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는 고통이었던 세계가 더이상 전쟁이 없는 세상으로 변할 것이다.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
	비서	103

< 200A >

69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
재일동포 입장에서

보고; 김영희

일본정부가 ‘민간기금에 의한 위토금’ 을 착착 추진하고 있는 현재 ‘기금’ 의 가동을 저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입니다. 동시에 피해자 개인에 대한 사죄와 국가보상을 이루기 위한 힘을 어떻게 축적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제안도 곁해서 보고하고자 합니다.

【 ‘민간기금’ 을 가동시키지 않기 위하여 】

벌써 결정은 했다고는 하나, ‘민간기금에 의한 위토금’ 으로 ‘위안부’ 문제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본정부도 살얼음을 밟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금’ 에 돈이 모일지, 피해자들이 받을지, 또 현재 침묵하고 있는 한국정부가 어떤 형태로 요구를 덧붙여올지도 모르는 등, 많은 불안거리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러한 일본정부의 약점을 찌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재일한국인 송신도씨를 비롯하여 한국이나 필리핀의 많은 피해자들이 ‘민간기금에 의한 위토금’ 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치에 맞는 돈이 아니면 의미없다’ (송신도씨) ‘민간으로부터 모은 동정의 돈은 필요없다. 일본정부가 제대로 사죄하고 보상해주기를 원한다’ (이순덕씨) 등, 피해자들의 국가보상요구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며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간기금’ 진척상황으로 보면, 4월부터 반년간정도 돈을 모으고, 가을에는 피해자에게 급부할 것이 예상됩니다. ‘급부를 받는나 마느냐’ 라는 식의 양자택일의 제한적이고 왜곡된 선택을 피해자에게 직접 떠맡기지 않기 위해서도 현단계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기금’ 의 가동을 막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민간기금’ 의 받기인후보자들에게 ‘기금’ 의 기만성을 호소하고 ‘받기인이 되지 말라’ 고 압력을 가하건거나 (일본의 지원단체는 공개질문서 송부를 계획중) 기부금이 모이지 않도록 기업이나 노동조합에 파상공격을 가하는 것들입니다. 뒤에 구체적으로 서술하겠지만, 침묵하고 있는 한국정부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사죄와 보상의 실현을 쟁취하기 위하여】

어제 보고에서도 있었듯이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 은 달혀진 일본국내의 조건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전쟁범죄라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책임도 방기하고 은혜토서의 '위로금' 에 의한 결착은 일본국내에서는 통한다해도 개인보상을 실시해온 독일이나 미국, 캐나다의 전례를 상식으로 삼는 국제사회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일본정부로 하여금 결정을 수정시키기 위해서는, 외교적 압력이나 국제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국내 '사정'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운동, '북경여성회의' 나 그 전단계의 '여성의 지위위원회' 에서의 로비활동, 또는 UN인권소위원회에서의 활동, 중재합의를 촉구하는 활동이나 ICJ권고를 널리 알리는 운동등,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활동을 담보로 일본정부에 국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작년 한해 동안의 우여곡절을 겪어 분명히 드러난 것은, 전후보상실현을 약속한 村山 (무라야마) 사회당위원장이 수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인보상이 후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회당정권에 대해 환상은 가질 수 없다는 것, 또 외무관료의 논리와 벽이 그보다 더 높다는 것을 통감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관이 주도하는 역관계를 논리상으로도 무너뜨리고,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 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부내에서 부상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국간조약으로 해결됐다' '한도가 없어진다' '헤당하는 국내법이 없으니 대응할 수 없다' 등 관료논리를 정면으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 필요하여, 그를 위해 보상입법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으며, 이미 다양한 운동이 시작되어 있을 줄 압니다. 여기서는 특히 재일동포 입장에서 보이는 점으로서, 한국정부를 움직이는 운동의 의의와 그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정부에 대한 행동】

아시다시피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전후보상문제는 모두 '양국간조약으로 해결됐다' 는 답변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일' 피

해자에 관해서는 양정부간에서 견해가 어긋납니다. 고陳石一, 石成基 씨등 '재일' 전쟁부상자에 대한 보상문제에 관하여 한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재일한국인 전쟁부상자의 보상청구권은 1965년 청구권협정의 해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일한국인 전쟁부상자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원호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1994년 1월 26일, 한국외무부의 답신).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을 놓고 양정부간에서 사실상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구권협정 3조에서는 협정 해석에 있어서 이의가 생겼을 경우의 중재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한국정부의 의지여하에 따라서는 이 점을 문제화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이 체결시에 문제로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한변협은 한국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해 '한일협정의 내용에는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문제는 포함되지 않았고 전쟁범죄와 같은 형사책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국간조약으로 해결됐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일본정부가 조일국교회복교섭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한일조약'에 있는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는 부분은 당연히 수정할 필요가 생길 것입니다. 즉 현재도 장래에도 한일조약 및 '한일청구권협정'은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뿌리가 흔들리면 일본정부의 '해결됐다'는 주장도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민간기금에 의한 위토금'이라는 결착을 외교상 문제가 생기면 수정할지도 모른다고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정부에게는 '말없는 한국정부'의 존재는 언제 불이 붙을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와 합의라도 본듯한 발언을 되풀이하는 것일까요? 행동네트워크가 일본외무성교섭을 했을 때, 외무성측은 '우리나라에서는 조약에 따라 성실하게 처리해 왔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에는 이의는 없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일본정부의 답변을 듣는 한, 한국정부가 '민간기금에 의한 위토금'에 고사인을 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오해를 풀지 않고 계속 침묵한다면, 이것도 역시 역사에 후회를 남기게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정부는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진행중인 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라고도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정부에 대하여, 아직도 진상규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일본정부가 김대통령의 '보상은 필요없다' 는 발언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 또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이 양정부간에서 어긋나고 있다는 점과 '제일동포' 상황을 알림으로써 '외교상의 압력' 을 발휘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에 '김대통령, 왜 가만히 침묵하고 계십니까?' 고 호소하는 내용의 의견광고 게재입니다. 한국동포들의 공감을 얻어, 피해국의 바닥으로부터 진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드높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한국의 의원들에 대한 요청활동등을 통해서 한국정부가 일본의무성과 정부에 외교상의 압력을 가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활동보고를 곁해서】

이어서 제일동포들의 활동과 메시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일한국인 전 '위안부' 송신도 씨 재판의 진척상황

송신도씨는 '제일의 위안부재판을 지원하는 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재작년 4월 5일 도쿄지방법재판소에 '사죄와 보상' 을 요구하며 제소했습니다. '청구의 취지' 에 보상금액을 굳이 명시하지 않아 온 것은 국가의 사죄 및 권리로서의 보상을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여섯번 구두변론이 행해졌지만, 1월 27일의 6차구두변론에서는 금액의 명시 없이는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1억2천만엔을 청구를 시도했습니다. 東条英樹 (도오조오 히데키) 등 A급전범이 만약 생존해 있었을 경우, 일본정부가 지급했으리라 상정되는 연금총액을 계산한 액수가 약 1억1천만엔입니다. 피해자의 청구액수가 가해자의 연금액수를 밑도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위토금' 의 금액이 백만엔이라고도 얘기되고 있는 현재,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었지만 (송씨가 입은 피해-몇번이나 강간당하고 성적 노예가 된 손해, 인신의 자유를 빼앗긴 손해,

전지에의 동행을 강요받아 생명을 위협받은 손해등-은 최저 767억5893만7500엔으로 시산되었다), 굳이 금액으로 제시하자면 1억2천만엔이 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거듭 국가의 사죄와 명예회복의 중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어성네트워크의 활동

개개인의 활동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년에 4번씩 회보를 발간하고, 한달에 한번 열리는 정례회를 기본으로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팀을 짜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연극 '소리없는 만가' 상연이나 PCA에 관한 활동, 여자차별철폐에 대한 반박보고서 작성, 정대협 인터뷰기록집의 번역출판등을 해왔습니다. 학교교육의 부(副) 교재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것을 만들기 위해 회원 5명이 "더 알고 싶은 위안부문제" 를 지난 1월에 발행하였습니다.

* '세계각국의 신문에 의견광고를!' 전후보상실현국제캠페인의 활동

국가책임을 얼버무리는 '민간기금' 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일본을 비롯 피해자를 안고 있는 아시아각지역, 그리고 세계의 신문에 '의견광고' 를 게재함으로써 널리 알리는 활동이, 작년 10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까지 毎日(마이니치) 신문, 동아일보, 뉴욕타임즈에 게재하여 한국으로부터 58통, 미국으로부터도 많은 쿠폰(무라야미수상에 대한 요청목적) 이 돌아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약 3개월 동안에 170개 단체 1370명의 찬동을 얻었습니다. 3월 1일에는 필리핀의 데일리 인콰이어터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

*제일한국민주여성회의 활동과 메시지

차별없는 사회,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결성된 이래로, 東京(도쿄), 大阪(오오사카), 東海(도오카이) 를 거점으로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월 1회의 정례회를 기본으로 하여, 기관지발행, 자료집발간등을 해왔습니다. 90년 이후부터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비롯 전후보상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모임에서의 강연, 학습회활동을 통해서 여론을

환기시켜 왔습니다. 또 '그대, 조선의 십자가여' 를 번역 출판함으로써 각지에서 이 낭독극, 연주회등이 열려 문제해결을 위한 공감대가 넓혀졌습니다.

우리는 전후보상문제를 조국통일과 분단극복의 관점에서 운동해 왔습니다. 조국분단과 남북대립이 전후보상문제의 해결을 늦추고, 남북의 여성들이 손잡는 것을 막아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3차아시아연대회의에 정치의 벽을 깨어 처음으로 북측으로부터의 참가가 실현되었고, 동시에 우리도 대표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은 해방50년인 올해가 더욱 역사적인 한해가 될 것을 여기게 하고 있어, 더욱 새로운 결의로 임하게 됩니다.

*大阪 (오오사카)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 생각하는 회' 메시지

회원 9명은 관서(關西) 지방에 거주하는 재일 2세. 93년에는 본동 '돌격일번' (突撃一番) 재생산사건에 대한 항의활동, 한국의 연극 '소리없는 만가' 일본공연을 전국 13군데서 실현시켰습니다. 현재, 젊은이에게도 이해하기 쉬운 '종군위안부문제학습비디오' 를 제작중입니다. 비디오는 2부 구성으로, 역사편으로는 '위안부' 정책의 사실과정을, 현대편에서는 전후보상문제, 제일한국인문제, 여성문제로부터 이 문제를 검증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족문제, 보상문제인 동시에 기지매춘이나 아시아각지에서 일본에 온 여성에 대한 강제매춘, 강간등 현존하는 성폭력사회를 근절하지 않는 한, '위안부' 문제는 재생산되는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본국, 일본, 세계의 여성운동과 연대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운동을 모색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국내의 운동과 국제적인 압력을 연결하여 운동의 네트워크를 더욱 넓히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실현해갑시다. '전후50년' 을 맞이한 올해를 문제해결을 향한 확실한 한걸음의 해로 하기 위하여 함께 전진합시다.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B127	104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68

지은희(정대협 기획위원장)

I.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의 운동목표와 지금까지의 활동내용

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의 운동목표

1990년 11월 16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결성된 이후 우리는 세가지의 운동목표를 가지고 활동해 왔다.

첫째,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같은 반인간적 범죄행위는 인류역사에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는 명예와 존엄성을 되찾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쟁중에 혹은 점령지에서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일어난 강간과는 달리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국가와 군이라는 공권력이 기획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한 성노예 제도였고, 이 제도를 위해 13-18세의 소녀 약 10-20만명이 강제로 끌려가서 군의 엄격한 통제하에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당하면서 노예생활을 당했다. 그리고 일본 패전후에 이 여성들은 유기 살상당하였고, 일본군이 기록조차 없애버림으로써 역사속에 폐기처분 당했다.

우리는 인류역사속에서 이처럼 추악한 행위를 발견해 내지 못했고, 따라서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가장 추악한 범죄행위라고 규정지었다.

이 범죄행위가 역사에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비인도적 범죄행위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또 가해국이 세계 강대국의 한 나라일지라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실때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간적 존엄성을 되찾아야 하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운동을 시작했다.

둘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가장 처절한 피해현실에 대해서 조차 일본의 사죄와 법적 책임, 배상을 받지 못한 한일관계는 평등한 한일관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른 해결을 우리 운동의 힘으로 만들어 냄으로써 한일관계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셋째는 진정한 아시아의 연대와 평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포함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일본의 사죄와 반성없이 진행되는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역할중대는 일본군국주의의 부활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처럼 우리는 역사속에 은폐되어 있던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한일간의 그리고 아시아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키고,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함으로써 '여성의 인권이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져야 한다는 점과 한일간의 평등관계정립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에 기여코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2. 정대협의 활동내용

정대협은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범죄인정, 국회결의 사죄와 개인사죄,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 위령비 건립, 역사교육, 책임자 처벌이라는 구체적인 7대 요구를 제시하며 활동해 왔다.

1) 대일본정부 활동

-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본정부, 국회를 상대로 하여 로비, 압력활동, 증언집회, 시위 등을 전개해 왔고, 특히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12시에 진행되는 수요정기시위는 1995년 3월 1일로 155차에 이르고 있다.

-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고발장을 94년 2월 일본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일본검찰측으로부터 접수조차 거부당했다.

- 국제중재재판 제소를 요구하는 중재합의서에 일본정부의 합의를 요구했으나 공식거부당했다(95년 1월 24일)

2) 대유엔활동 및 국제활동

1992년 8월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참석하여 공식발언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이 적극 나서도록 하는 활동을 계속중에 있다. 유엔 활동의 결과로 일본군'위안부'문제는 국제법적 범죄행위로 공인되고 있으며 일본이 법적 책임(사죄, 배상, 책임자처벌)을 져야 한다는 보고서들이 유엔 인권위원회, 인권소위원회, 현대형노예제분회 등에 제출되었다.

- 유엔 인권위원회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형태를 조사하도록 임명한 특별보고관인 반보벤 교수의 보고서에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포함하도록 1993년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결의하였으며, 그 보고서는 94년 2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 또한 1993년 8월,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전쟁중에 일어난 여성에 대한 조직적 성폭력문제에 대해 조사하도록 특별보고관으로 린다 차베즈를 임명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고, 95년 5월 21-25(예정)일경 한국을 방문하여 조사할 것이다.

- 1994년 2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인 쿠마라 스와미를 임명하였고, 쿠마라 스와미는 95년 2월, 유엔 인권위원회에 1차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여기에는 국가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부분에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95년 말경에는 전쟁중에 일어난 성폭력을 다루는 보고서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조사내용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것이다.

- 1994년 2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결의문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자에 대한 불처

별문제 특별보고관인 조아네와 귀쎬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 문제를 다룰 것을 권고하였다.

- ILO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이자 저명한 국제법학자인 P.N. 바그와티가 지난 1994년 9월 23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강제노동이며, 이것은 일본정부가 93년 8월, 2차 보고서에서 강제성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공식 인정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994년 6월, 아태지역 각료회의에서는 전쟁중에 일어난 성폭력에 대한 가해자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결의문에 포함시켰다.

- 1994년 11월 23일, 국제법률가협회(ICJ)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명백히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즉각적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는 점과 1965년 한일협정의 청구권에는 불법인권침해와 '위안부' 개인의 권리침해에 관한 청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3) 아시아 피해자 및 일본여성단체와의 연대활동

- 남북여성의 연대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남한.북한.일본여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남북여성이 정신대문제에 대해 서로 연대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 등 국제활동에서도 남북이 함께 포럼 및 공청회 개최 등 연대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 일본여성단체와의 연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일본의 여성단체 그리고 학자들, 변호인들을 포함한 양심적인 일본국민들과의 활동을 통해 한일 양국 국민의 연대와 이해를 촉진시키고 있다. 특히 정대협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PCA에 제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일본변호사들과 몇 여성단체들 중심으로 조직된 'PCA를 성공시키는 모임'과의 연대를 통해 일본에서의 집회개최, 시위 등으로 일본정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

- 아시아의 연대

1992년 8월 10-11일, 서울에서 제 1차 아시아연대회의를 개최하여 아시아연대를 조직하였고, 이 회의 이후 연례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서로의 활동을 교류하며 연대하고 있다.

아시아연대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네덜란드 등이다.

4) 피해자 할머니의 생활보호활동

- 92년 12월 1일, 정신대할머니 생활기금 국민운동본부를 조직하여 모금한 것을 93년 7월, 62명의 피해자에게 250만원씩 지급하였다.

- 정부가 일제하 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여 일시불 500만원과 매월 20만원씩 지불, 의료혜택, 영구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생활보호대상자 혜택 등을 94년 5월, 국회에서 통과하여 동년 8월부터 시행중이다.

- 기타 할머니 복지활동

정대협은 할머니복지위원회를 기구내에 조직, 할머니들의 병원알선, 상담, 주거 문제, 장례절차 등의 복지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단체 중 하나인 불교인권위원회 여성분과에서는 '나눔의 집' 건립준비위원회를 구성, 현재 6명의 할머니들이 나눔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다.

3. 정대협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7대 요구와 경과

정대협 7대 요구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현실

7대 요구	진행 상황
<p>1. 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의 전모를 공개하라!</p>	<p>* 일본정부의 태도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런일 없었다며 부인 . 있었다. 그러나 민간인이 한 일이다. . 국가, 군 개입인정 . 일본정부 1차 진상조사 발표(92.7.6) : 강제성 부인 . 일본정부 2차 조사발표(93. 8.4) : 강제성인정, 그러나 강제모집의 주체가 민간업자로, 군. 관헌의 주도적 관여는 부인하는 등 부분적 강제성 인정. . 위안부 총 숫자/정책입안자, 관리, 운영 등의 명령체계/ 위안소 생활상태, 패전후 조치 등에 대한 자료공개는 아직 까지 하지 않음. <p>* 민간연구자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안부 제도에 일본군. 국가의 주도적 관여, 명령계통조사
<p>2. 위안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안부 제도 사실인정 . 그러나 '위안부' 제도가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죄, 추업을 행하기 위한 부녀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약, 강제노동 금지조약, 노예제금지조약 위반임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음
<p>3. 위안부 범죄사실에 대해 사죄하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 방일시 일천황 "통석의 염" . 92년 1월 8일 미와자와 수상 방한시 "반성과 사과의 뜻" . 93년 11월 5일 호소카와 수상방한시 "진사드린다" . 95년 2월 현재, 연립여당의 국회의 부전결의안 조차 자민당 등이 반대 . 국회결의 사죄와 개인에게 사죄안하고 있음.
<p>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정부 입장 : 배상할 수 없다. 65년 한일협정으로 끝

법적으로 배상하라!	난 일이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기금'을 만들어 민간모금을 통해 위로금을 지불하겠다. (약 100만엔 이하)
5. 위령비를 건립하라!	진행되지 않음
6. 역사교과서에 명기하여 가르쳐라!	1994년부터 7개 교과서에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다루고 있음. 그러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범죄성, 성격등은 없이 피상적으로 언급
7.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본검찰, 정대협과 피해자가 94년 2월 7일, 제출한 책임자 처벌 고소. 고발장을 접수조차 거부

II. 올바른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활동방향

1. 일본정부의 민간위로금안 철회요구

어제 각국에서 발표한 대로 피해자와 피해국이 모두 반대하는 일본정부의 민간위로금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일본정부로 하여금 이 안을 철회하도록 만들기 위해 크게 4가지 방향에서의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오늘의 연대회의와 같은 피해자와 피해국 운동단체들의 반대연대집회를 조직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국제법률가협회의 권고내용과 의미를 알리는 사업이다. 정대협에서는 이 권고문 중 중요부분(일본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상 의무의 근거와 내용을 명시한 부분)을 번역하여 법률가, 국회의원, 중요행정기관, 언론에 배부했으며 앞으로는 다양한 토론회를 조직할 예정이다. 셋째는 한일 시민사회의 양심적인 세력과의 연대강화를 통해 민간위로금안 반대세력을 확장할 예정이다.

정대협은 금년 2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였는데 이를 통해 가장 큰 대중단체인 한국노총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직접적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 공청회에 참여했던 시민단체의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권, 인권문제에서 나아가 인류양심의 문제이며 따라서 시민사회의 양심에의 도전을 통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논평하였다. 정대협은 한국의 시민단체와 일본의 시민단체의 동참을 유도할 구체적 프로그램을 기획중이다. 특별히 '해방 50주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는 문제제기를 통해 한국의 시민단체, 민족단체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에 동참시킬 예정이다. 넷째는 해결이 늦어지면서 연로하신 할머니들이 당하고 계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줄여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합의요구와 특별법배상법 제정요구

정대협은 25번에 걸치는 회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PCA(국제중재재판소)에 가져갈 것을 결정했다. 그 이유는 그동안의 정대협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죄, 배상, 책임자처벌을 해야 한다는 다양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해국인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범죄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국제기구로 하여금 국제법에 근거하여 일본의 행위가 범죄행위인가? 그리고 정신적 물질적 배상이 1965년 한일 청구권조약으로 완결되었다는 일본의 주장은 과연 정당한가? 현재 일본의 배상책임은 없는가? 등을 판단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정대협으로서의 차선책을 택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밝혀지고 일본정부가 인정한 범위내에서만 보더라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였으나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권은 국가만이 가지고 있었고, 한국정부가 제소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민간단체가 접근할 수 있는 국제재판은 PCA 뿐이었다. 한편, 일본으로서는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할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었다.

우리로서는 일본정부가 중재합의에 이를 것을 대비하여 할머니들의 위임을 받아 94년 9월 한일 PCA 변호인단(한국38명, 일본 70명)에게 일본정부와의 합의서를 체결할 것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PCA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우리들의 요구를 95년 1월 공식 거부함으로써 일본정부의 주장의 허구성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 시점에서 정대협은 일본정부로 하여금 PCA제소에 응하든지 아니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사죄와 배상,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는 특별법제정을 서두르든지 양자택일을 하도록 강제할 수 밖에 없다.(일본이 국제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 한 별도의 국내법 제정이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사죄, 배상, 처벌 작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강제할 수 있는 힘의 크기는 우리들 운동의 힘에 의해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크기에 좌우될 것이다.

3. 유엔관계활동강화

- 94년 10월 9일부터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없는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를 위한 국제적 서명의 결과를 3월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참여하여 유엔에 제출하려고 한다. 그리고 아시아의 연대활동을 통해 이 운동은 계속할 것이다.

- 현재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전쟁중에 가해진 여성에 대한 조직적 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인 린다 차베즈의 조사,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보

고관인 쿠마라 스와미의 조사, 심각한 인권침해범죄자에 대한 불처벌문제 특별 보고관인 조아네와 귀쉴의 조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한국방문 초청 및 토론회를 5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포럼을 개최할 것이다. 1995년 8월 30일 - 9월 8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 4차 세계여성대회와 NGO포럼에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기하기 위해 계획을 협의중에 있다.

4. ILO를 통한 제소모색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일본군'위안부'문제는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이다. 여기서 강제노동이란 '스스로 자원하지 않았음에도 불이익의 위협하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노무'를 말하며 특수하고도 불가피한 경우에 극히 세밀한 제한과 조건을 두어 강제노역을 인정하되 이를 위반할 수 없도록 조약에 치밀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추정연령 18세 이상 및 45세 이하 성인의 건강한 남자만이 강제노동에 징집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 어떤 경우에도 여성의 강제노동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 의하여 자행된 일본군'위안부' 충원과 관리가 위의 강제노동금지조약에 위반된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성에 대한 강제노동은 무조건 금지된다(제 11조)는 점에서 일본군'위안부'제도는 강제노동조약을 위반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위의 강제노동금지조약을 1932년 11월 21일 조약 제 10호로 비준하였다. 그리고 효력을 발생한 것은 1933년 11월 21일의 일이었다. 강제노동조약은 일단 효력을 발생하면 그때부터 10년동안 조약의 폐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1944년 11월 21일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이 조약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어 일본군'위안부'제도가 실행되던 거의 전기간동안 이 조약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자 단체들이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 26조에 의한 제소로써 일본정부의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강제노동금지조약 불이행을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대협은 유엔의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ILO에 제소하는 방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의 확산과 국제적 압력을 가증시킬 길을 모색하고 있다.

5. 진상규명 사업의 진전과 자료관 준비

일본이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당시 연합국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내에서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사실을 밝혀내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대협은 사학자, 사회학자, 여성학자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식민지 시대 자료분석을 통한 백서를 준비중이다. 그리고 정신대연구회와 함께 할머니들의 2차 증언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이 패전후 중국에 버리고 온 할머니들의 증언집을 일본의 비인간적 행

위가 피해자들의 삶을 얼마나 철저히 파괴했는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해방 50주년을 맞아 할머니들의 생활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와 자료전시를 준비중이다.

6. 한국정부의 적극적 역할요구

한국정부는 정대협이 낸 질의서에 대한 공식답변에서 65년 한일협정에 책임자처벌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문서번호 아일 12000-475)과 민간차원에서 진행중인 배상청구소송 등에 관해서는 깊은 관심과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아일 22220-422)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한국정부에게 PCA중재소송에 대한 지원과 ICJ가 권고한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65년 협약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도록 운동을 펴고자 한다.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본정부로 하여금 최소한 ICJ의 권고대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일본정부의 한치의 변화도 없는 오만하고도 후안무치한 태도는 우리를 분노하게도 하고, 허탈하게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싸워 왔다. 다시 한번 힘을 가다듬어 우리들이 연대한다면 우리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66

왜 민간모금구상에 반대하는가

이시가와 이즈코(石川 逸子)

우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가해국의 여성으로서 커다란 책임을 느끼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피해자 여러분이 목소리를 높이시기 전에 일본 여성인 저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본정부가 진상구명, 피해자 여러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하도록 활동을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1. 일본정부의 현재 태도

작년 12월 22일, 무라야마(村山)수상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보상 등에 관한 질문에의 답변"에서 다음의 것을 언명하고 있습니다.

- ◇ 「샌프란시스코조약, 양국간조약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왔으므로 개인보상을 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
- ◇ 「『중군위안부』의 정책이 국제법위반이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 ◇ 「경찰청에서 관계자료를 성실히 조사했으나 해당자료는 없었다.」

국제법률가위원회(ICJ)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일본군에 있고, 일본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최종보고서²⁾를 11월 22일에 공표했습니다만, 그 치밀한 보고를 무라야마수상은 전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 ICJ는 9월 2일에 초고를 일본 외무성에 보내어 검토를 요청하고 있는데, 외무성은 이것을 정부수뇌, 여당의 중군위안부문제 등 소위원회의 위원들에게도 감추고, 「받지않았다」 심지어는 「받았으나 외무성에 만나지도 않고 만든 것」이라고 거짓발언을 하고, 항의하러 방문한 ICJ대표에게 오로지 해명과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³⁾. 그러나 그때부터 1개월후 무라야마수상의 답변은, 이전부터의 외무성 답변과 전혀 다름없이

- 1) 「참의원 의원 吉川春子 問合せ 「중군위안부에 대한 개인배상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내각참질 131 제13호 내각총리대신 村山富市 94. 12. 22
- 2) "Comfort Women an unfinished ordeal Report of a Mission"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Geneva, Nov. 1994
- 3) 아시히신문 94.12.10 「NGO항의에 외무성이 진사」 전국부인신문 94. 12. 20 「ICJ 외무성에 강하게 항의」

수상으로서의 주체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12월 27일, 무라야마수상과 세계여성의 해 연락회(52개 단체)와의 간담에서, 동석했던 이가라시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 「양국사이에서 배상은 해결되었다는 것이 외교상 확인되고, 한국정부가 일본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꾸며낸 방법이 민간모금구상이다.」
- ◇ 「95년도 예산안에 민간모금설립을 위한 사무비, 홍보비로써 약 5억엔을計上했다」
- ◇ 「모금 구체화를 위해 일본 적십자에 협력을 요구하여 「찬동인」으로써 經團連, 연합에도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 ◇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을 포함해 총리의 편지를 첨부하고 전「위안부」 한명 한명에게 전하고 싶다.」

한국정부는 「피해자 개인의 요구에는 협력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고, 일본 외무성도 「상호간에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으로서 개인 청구권 자체가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된 것은 아니다」고 답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배상을 하지 않는 것을 상대국의 책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략전쟁의 최고책임자인 천황家 일족이 명예총제나 명예부총제를 맡고 있는 일본 적십자사가 민간모금을 취급하는 것도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1월 24일 「국제중재재판합의서에 합의하고 상설중재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의 제안에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조약 이외의 관련 조약에서 성실히 대응해 왔다」는 것으로써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튿날, 저희들 「행동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의 요청을 외무성에 하였습니다만, 회답은 같았습니다. 또한 그때의 여성에의 폭력에 관한 구마라스와미 UN특별조사관의 보고는 「반드시 새로운 내용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국제법률가위원회(ICJ)의 보고서가 취하고 있는 권고에 관해 「명령이나 지시는 아니므로 법률적으로는 이것에 따를 의무는 없다」고 말하였으며, UN 인권 소위원회에서의 반보벤 최종보고서(1993.9.2)를 무시하는 등 가해국답지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2. 민간모금구상이 생긴 배경

무라야마내각은 이미 작년 8월 12일에 민간모금으로 해결하는 방침을 굳혔습니다만, 같은 날에 사쿠라이 환경청장관이 「일본은 침략전쟁을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시아는 그 덕에 유럽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되었다.」고 하는 망언을 했던 것은 실로 상징적인 사건으로 생각

- 4) I 여성신문 95. 1. 31 「더욱 여성정책에 힘을」
- 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의 질문에 대한 한국정부의 회답서간 93. 8. 28
- 6) 91. 8. 27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의 清水 登子 의원의 질문에 대한 외무성 답변
- 7) 아사히신문 94. 8. 13
- 8) 아사히신문 94. 8. 13

됩니다.

작년만해도 난징(南京)대학살은 사실무근의 조작된 것이며, 「위안부」는 「당시의 공창, 또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군, 영국군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나가노 빙무대신의 망언⁹⁾,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서의 전쟁은 침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어떤지 미묘하다。」고 하는 현 하시모토 통산대신의 망언¹⁰⁾ 등이 연속해서 있었습니다. 永野, 사쿠라이의 각 대신은 경질되었습니다만, 일본유족회 회장으로 있는 하시모토 통산대신의 발언을 무라야마내각은 「문제없음」¹¹⁾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침략전쟁을 긍정, 찬미할 목적으로 작년이래 에히메, 시가 등 19의 현의회가 일본 전사자에게 「추도」와 「감사」의 뜻을 표명하는 결의를 잇따라 채택하고¹²⁾, 올해 1월 31일에는 자민당 143명의 의원이 「국회사죄결의에 반대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있습니다¹³⁾. 조선인 여학생이 몽학도 중 치마저고리를 찢긴 사건도 빈발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50년전인 1945년 8월 14일,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항복한 일본은 이른날 8월 15일 정오, 昭和천황이 라디오방송에서 국민에게 그것을 알렸습니다만, 그 때 천황은 「이 전쟁은 자위와 아시아의 안정을 성취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써 다른 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영토를 침범하는 등은 원치 않았다」¹⁴⁾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 점령아래 처음 열린 의회에서 천황家에서 총리대신이 된 東久彌宮수상은 「終戰」이 천황의 덕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패배한 것에 대해서 전국민이 총참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¹⁵⁾. 매스컴도 「마침 1억 총참회매의 때」라고 이것을 클로уз업 하고, 1억 가운데 식민지 지배를 해서 괴로움을 준 대만인 1천만명, 조선인 2천만명의 존재가 있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패전이후 불과 3일후에 내무성은 전국의 지방장관에게 점령군상대 「위안부」 설치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에는 정부와 업계의 공동출자에 의한 「특수위안시설협회」의 결성식이 천황거주 앞마당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 당시 정부는 1억엔을 지출하였습니다. 점령군에 의한 성적 사건이 무장해제되어 귀국하기 시작한 군인들을 자극하고, 천황제를 뒤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지배층의 염려로부터 재빨리 취해진 정책¹⁶⁾이며, 천황제 보호유지를 위하여 일본정부는 「女衛」이라고 하여 점령군에게 일본 여성을 제공하므로써 여성의 인권은 또다시 무시되었던 것입니다.

아시아 여러나라에의 침략전쟁, 아시아 여러나라 국민에의 잔학한 갖가지 범죄에 관한 무반성, 무자각한 남성들이 전후에도 권력자로서 계속 있다고 하는 특이한 역사를 걸어온 일본은, 연합군의 점령이 끝남과 동시에 아시아의 피해자에게 보상하기는 커녕 침략전쟁을 추진했던 군인에

9) 아사히신문 94. 5.5 동 5.7 「소위 난징대학살, 있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10) 91. 10. 24 중의원 세계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침략전쟁에 관한 질문에 대한 橋本通産相의 정부답변

11) 아사히신문 94.10.26 무라야마 수상은 「문제없다」

12) 滋賀縣의회 결의 제3호 별지A

13) 회장은 전 國十廳장관, 장관시절, 「침략전쟁은 아니었다」고 발언

14) 田中伸尙 「다큐멘트 쇼와천황」 동경, 綠風출판

15) 田中伸尙 「다큐멘트 쇼와천황」 동경, 綠風출판

16) 스즈키유우코(鈴木裕子) 「중군위안부와 성폭력」 동경, 미래사 1993, 田中伸尙, 앞의 책

의 연금(恩給) 등을 부활시켜¹⁷⁾ 그 액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 예산¹⁸⁾에서는 일본의 전상병자에 대해서는 1인 평균 551만4천엔, 전몰자(사망자) 1인 평균 187만 8천 900엔으로 지급액이 인상되었으며 그외에 연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 형제자매 등의 유족 151만명에 대해서 특별 조위금 40만엔의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아시아 여러나라와의 전후처리도 그 국가에 대한 경제협력(실은 일본기업의 이익이 됨)이라고 하는 형태로 종식했고, 「나치의 부당함」의 피해자가 된 개개인의 배상을 골자로(주로) 하는 독일과는 대조적인 역사¹⁹⁾를 새겨왔습니다.

일본 군국주의가 아시아 인민의 저항에 의해 패배했다고 하는 인식을 갖지 않고, 야마모토민족 우선의 정신주의에서 「황금만능주의」로, 패전으로부터 변신한 일본인은 국가에의 충성을 회사로의 충성으로 변화시켜 경제대국을 만들었고, 갑자기 생명과 마음보다 돈을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아시아인 멸시, 여성멸시, 배금주의는, 일본인의 정신에 깊이 스며들어 여성이면서도 「위안부는 전쟁비즈니스의 일환으로써 파생되었다」²⁰⁾한 것이며, 「최저한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악」²¹⁾이었다는 등으로 뻔뻔스럽게 주장하는 가미사카후유꼬(上坂冬子)²²⁾ 등의 평론가가 매스컴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위안부문제해결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가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은 국가에만 있지 않고 국민에게도 있다고 하여 지금까지 양심적이었던 지식인마저 민간모금구상실현을 위한 선동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²³⁾.

이와같이 저희의 운동의 미숙함에서 민간모금구성의 문제점이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 있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3. 왜 민간모금에 반대하는가?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것처럼 일본 정부에는 이 문제를 비할 데 없는 성범죄, 전쟁범죄로써 보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고, 무라야마 연립내각은 침략전쟁을 긍정하는 세력과 타협하는 가운데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UN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하여 넘어야 할 장애물로써만 보고,

- 17) 田中雄 「일본은 전쟁책임에 어떻게 대해 왔는가?」 『세계』 1994년 2월호 기타 별지B
- 18) 1995년도 예산안 별지C
- 19) 아사히신문 95.1. 「독일발 일본 배상과 보상」
- 20) 주간포스트 92년 3월 6일호 「이번은 가미사카후유꼬가 박정자(한일여성친선협회장)와 격렬대론」
- 21) 주간포스트 92년 3월 6일호 「이번은 가미사카후유꼬가 박정자(한일여성친선협회장)와 격렬대론」
- 22) 가미사카후유꼬의 소론에 대한 반론은 스즈키유우꼬 「페미지즘과 조선」 도쿄, 明石서점 1994 참조
- 23) 그룹성과 천황제를 생각하는 모임, 「지금」 제2호 1994. 10

이외의 강제연행피해자와 유족에의 배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절대로 개인배상은 하지 않는 것이 「國益」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외무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엄청난 범죄를 범하더라도 배상은 하지 않아도 좋다. 즉 나쁜 일은 조금 하는 것보다 많이 하는 것이 득이라고 하는 논리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 한명의 소녀를 감금하고 운간했던 남성들이 있고 처벌도 안당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러모은 돈을 「사죄의 대신이다」라고 피해자인 소녀에게 준다고 하면 소녀의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깊어질까요.

일본 정부는 지금 그 남성들과 똑같은 일을 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국가라고 하는 강대한 권력이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행했던 흉악무도한 범죄이므로 그것을 국민으로부터 (에게서) 그러모은 돈으로 끝내려 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입니다. 가해국이라고 하는 것에 무자각하기 때문에 나온 정책이며, 또 「상대는 가난하기 때문에 어떠한 돈이라도 주면 입다물 것」이라고 하는 피해자에 대한 멸시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아시아 사람을 강제 연행하고 노예노동을 강요한 기업에 있어서는, 사죄와 배상이 아닌 '선의'의 모금으로써 면세조치도 있는 이 구상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1946년부터 47년에 걸쳐서 강제연행된 중국인, 조선인을 사용했던 광산, 건설, 조선 등의 기업은 전이 좋지 않은 노동자를 썼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하고, 또 그들을 송환하는 비용을 썼으므로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엄청난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한 가해기업이 그 때문에 이미 많은 국비를 받고 있고, 지금 얼마 안되는 모금의 돈을 내놓는다면 「범죄는 얼마 안되는 선물으로써 얼버무려진다」고 하는 무서운 교훈을 일본국민에게 증언하게 됩니다.

필요한 것은, 잘못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왜 이러한 일을 했는가? 하는 반성으로 시작되는 깊고 진지한 진상구명이 이루어지고, 강대한 가해국이 반성하지 않은 채 변영하고, 피해자가 몸과 마음의 상처로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잘못된 현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민간모금은 문제를 은폐하고, 아시아와의 진실된 우호를 방해하는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용인의 구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여성들의 협력을 얻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민간모금 구상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된 해결을 위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번역: 황은자)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B127	93

민간위로금을 왜 반대하는가?

김 경 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무)

금년 1995년은 태평양 전쟁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일제 침략기간중 일본군에 의해 침해된 개인의 권리가 회복되고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아시아인들 전체가 참된 의미의 기쁨을 향유하는 해가 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더구나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고, 유엔 산하 기구에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는 이 시점에서 제 3차 아시아연대회의를 열어 함께 전후 50년 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가를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다.

지난 2월 초 무라야마 내각은 전후처리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를 대상으로 한 [아시아평화우호 기금](가칭) 구상의 명칭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 기금'으로 하고, 10억엔 정도를 국민모금으로 조달하는 한편, 정부는 홍보, 사무비 등으로 5억엔을 보조한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1100명 전 군대위안부를 일시금 지급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며 지급액은 일인당 100만엔 이하로 할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 정부주도의 민간위로금안에 대하여 이미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고, 지금도 절대 반대한다. 일본정부는 이 위로금안을 철회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관련국과 피해자들의 신뢰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무라야마 일본총리가 발표한 전후보상안은 적어도 피해 당사자인 한국과 아시아의 주변국가들이 어느정도 만족한다는 평가가 나올수 있을 만큼 이행되어야 한다. 보상의 의미를 넘어서 배상의 태도여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배상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얼마만큼 진실하고 성실하게 과거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속죄하는가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러한 태도가 결여되었을 때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신뢰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그렇게 원하는 거부권을 갖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아시아에서는 지지를 얻지 못한 것도 왜 일본이 불신을 당하는지 알아야 한다. 전실된 과거에 대한 사죄가 신뢰회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피해자에게 민간모금으로 위로금을 전달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생각하겠지만, 더구나 일본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케 하여 그 명분을 세우기 까지 한다는 것은 과거 책임을 덮어 둔 눈가림으로 불신을 조장할 뿐이다.

그리고 진실된 사죄는 국회결의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과거 일본수상들이 공식석상이나 혹은 사적인 모임에서 과거 전쟁에 대한 사죄를 표명했지만 개인의 사죄는 내각의 각료들에 의해서 도전받거나, 부인당하여 왔다. 그러므로 사죄는 일본국회의 결의를 통해 일본전체의 사죄로 표현되어야 한다.

2.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야만적 행위는 국제법상 비인도적 범죄이며 전쟁범죄이다.

이 범죄는 시효가 없으며, 조약으로 면책시킨 바도 없으므로 일본정부는 현재도 관련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 이 범죄는 부녀매매금지조약과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ILO) 제 29호 조약 "육전의 범 및 관습에 관한 협약" "노예제를 금지시키는 국제규약"에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국제법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 정부가 설사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할지라도 국가간 조약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현재까지 인권침해 배상책임과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여 온 것에 대한 "불처벌의 책임"도 져야 한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를 통한 해결방법도 일본정부가 피하는 마당에 전후 50년이 되도록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들을 방치하고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당해온 신체적, 인격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감안하여 개인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더구나 국제법률가협회는 94년 11월 22일 권고문을 내어 위안부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일본은 아직도 진실을 파헤치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었다. 도대체 이 제도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계획되고 수행되었는지 명령의 책임소재가 어디인지 강제연행소녀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밝혀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응당 일본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제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배상은 할 수 없다고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을 준다니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공식적으로 묵인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범죄성에 대해 민간인 스스로가 이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모든 법적 책임은 이제 끝이 났다는 식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오히려 아시아 피해국에 당사자들은 일본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을 다 함으로써 올바른 역사를 정립해 가도록 촉구해야 한다.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고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할머니들은 역사의 피해자이며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있는 역사이다. 그들이 겪었던 고통은 어떤 돈으로 위로를 할 수는 없다. 50년전 일본군에 의해 짓이겨진 인권과 명예는 일본정부로부터 당당하게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범죄적 성격은 가리워지고, 민사적인 성격, 돈의 문제로 왜곡되어 할머니들을 두번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일본정부는 자신들이 응당 책임져야 할 국제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배상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민간에게 그 책임의 일부를 전가하여 위로금을 전달하여 준다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가해자를 미화시키고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 시키는 처사인 것이다. 전쟁중에 일어난 조직적인 강간에 대한 비난은 받아 마땅하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피해자들의 호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는 벌써 150여회째 역사의 진실을 촉구하는 외로운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위로금은 너희 일본거지에게나 줘라. 먼저 용서를 빌라. 너희의 사죄야말로 우리의 명예가 회복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배상하라." 할머니들은 오늘도 절규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할머니 증언 집회후 어느 일본여성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 '지금 내딸들이 지금 나이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하면서 미안하다고 울먹였다. 그런데 일본뿐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 세계 다른 나라에도 배상금을 청구할 것이냐고 물으면서 싱가포르에 사는 내 친구의 말이 한국 아버지들은 돈받고 딸을 많이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중국의 조공녀, 미국의 양색시, 오늘날 기생관광도 같은 문제로 보는 것은 일본사람의 시각에서 본 한계이다. 세계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 임금이 기획하고, 입안하여 군대,경찰 통제하에 점령지 13-18세의 소

너들을 20만명이나 몰았다고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가하면서 성노예를 삼다가 전쟁에 지고 떠날때는 어린 여성들을 유기, 살상하고 기록을 없애서 역사속에서 폐기처분했습니까?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민간위로금으로는 절대로 은폐할 수 없는 역사에 다시는 잊어서는 안될 사건이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진정한 이웃으로 평화를 공유하고 살자면 진실된 사죄와 배상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국제법 질서에 대응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즉, 일본정부가 민간모금 위로금안을 철회하고, 개인에게 법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며 후세에게 진실된 역사를 가르치도록 아시아에 있는 피해자 당사국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국제적 연대를 더욱 끈고히 하자. 진실이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치자.

53

Lila-Pilipina
(Task Force on Filipino Comfort Women)

일본정부의 “위로금”모금 계획에 대하여

Nelia Sancho
(Lila-Pilipina 회장)

일본정부에 개별적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희생자들은 거지가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그들의 인권을 되찾으려고 싸우는 여성들이다. 그들은 일본정부로부터 충심의 정중한 사죄와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들이 받은 모든 고통과 피해를 보상받아야만 한다.

Lila-pilipina는 민간에서 '기금'을 모으려는 일본정부의 계획에 반대한다. 그것은 일본정부로 하여금 희생자 개인에의 직접적 배상의무를 회피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일본정부이다. 2차대전 전과 그중에 광범한 지역에 위안소를 세우고 일본군인들만이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일본제국주의 군대이다. 일본군은 일본군인이 있는 모든 곳에 위안소를 세웠다. 중국,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델란드의 여성들이 이 군위안소에 감금되어 강압적인 상황에서 성적 서비스를 강요 받았다. 군대를 엄격히 통제하고 그 통행과 이동을 통제한 일본이야말로 여성을 매매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 책임을 현재의 일본정부는 받아 들여야만 한다. 그 참혹함이 얼마나 광범하게 행해졌는가를 생각하면 정말로 섬뜩해진다. 그 여성들이 견뎌야 했던 위안소의 상황을 생각하면 또한 섬뜩하다. 그것은 생지옥이었던 것이다! 그 여성들은 짧게는 3주일로부터 길게는 십수년을, 매일매일 밤에는 장교에게 낮에는 15, 20 또는 30명의 병사들에게 강간을 당한뒤에, 맞고 고문당한 것이다. 그 상황은 억압적이고 비참했다. 군의가 가끔 건강진단을 했지만, 많은 여자들은 성병에 걸렸다. 전에 몸과 마음이 건강했던 여성들은 위안소에서 병들고 마음은 망가졌다.

일본정부는 이 일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성들이 당한 폭력에 대해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일본정부가 민간에서 돈을 모아 위로금을 건네주는 것으로 그친다면 이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은 회복될 수 없다.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일본정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것을 시민에게 돌리지 말고, 정부가 이 여성들에게 지은 전쟁범죄의 책임을 일정 문서화해야 한다.

일본정부가 전쟁희생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개별적인 배상을 하는 문제는 반세기가 지나도록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 일본과 연합국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문서와 기록들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희생자 면담을 행해야만 한다.

일본은 배상을 일본국적인에게만 실시했다. 일본은 타국적의 희생자들에게도 직접 배상해야만 한다. 일본은 다시는 이러한 전쟁과 군국주의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멸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만한다. 그러한 범죄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범한 죄악이 기억되어야만 한다. 일본과 필리핀의 가정과 학교에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필리핀과 한국의 그리고 자신을 공개한 모든 위안부들은 일본이 행한 강간과 성적 노예화가 전쟁범죄임을 말해야만 한다. 그들은 여성에 대한 범죄에, 인권침해의 범죄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지지자들, 여성의 인권과 평화와 정의를 옹호하는 우리들은, 전쟁과 갈등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계속 사회운동과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이다.

52

제 3 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공동 결의문

1995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한국, 필리핀, 대만, 일본에서 온, 민간단체의 대표들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 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를 진행하였다. 참가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북한 대표들이 오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는 아쉽게 생각하지만, 북한 대표들이 발제문을 보내 주어 이번 주제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밝혀 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개 나라의 의사와 연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1995년은 전후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우리 전체 회의 참가자들은 전쟁이 끝난지 50년이 되는 오늘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명백한 인권 범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치솟는 분노를 표시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이 더 이상 미루어 져서는 안된다는데 대해 뜻을 같이 한다. 우리들, 회의에 참가한 모든 피해자와 대표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로기금안'은, 일본 정부 당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도덕하고 기만적인 것으로 규탄하고, 이에 강력하게 반대할 것을 결의한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아시아 각 국을 다니면서 민간위로기금안을 받아 들이도록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들을 혼동에 빠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강력히 대처하기로 한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일제가 아시아의 침략과 전쟁 중에 저지른 가장 잔혹한 범죄 행위이다. 따라서 이것은 일본이 과거 침략과 범죄를 반성하는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 전쟁의 아픔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 속에서, 아시아 민중들의 분노 속에서 지속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전쟁을 반성하지 않은 채,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일본 내의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전쟁의 위험성은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과 미래의 여성의 인권과 아시아의 평화를 확립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폭력을 영원히 추방하는 문제라는 점을 확인한다.

1993년 10월 22일 제 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참가자들이 일본 정부에게 요구한 사항들이 아직까지 하나도 이행되지 않은데 대해 다시 한번 분노하면서, 다음 사항을 제차 일본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1.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천황제 파시즘과 군국적 국가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전쟁범죄임을 인정할 것.
2. 일본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전 지역에서 실태 조사와 피해자 총 수, 국가별 명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제 3차 보고서를 제출할 것.
3. 일본 정부는 기만적인 '민간위로기금안'을 철회하고, 피해자 배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4. 일본 정부는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전쟁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시효부적용 조약'에 가입할 것.

5. 일본 정부는 상설국제중재재판소(PCA)의 중재에 응할 것.

6. 일본 정부는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해 올바른 자각을 갖도록 과거 침략 역사와 평화인권 사상에 대한 2세 및 시민교육을 철저히 할 것.

우리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아픔을 모든 여성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땅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과 폭력을 퇴치하고, 나아가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하며 아시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아시아 여성들의 연대를 소중히 인식하고 그것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다짐하며,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의 행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민간위로기금안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강구한다.

2.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지속한다.

3. 유엔 인권위원회의 특별조사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아울러 일본 정부가 유엔 인권위원회, 국제법률가협회,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이 제안한 권고등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편다.

4. 일본정부가, PCA 중재에 응하고 특별배상법을 제정하도록, 각국의 운동을 확대한다. 또한 일본 국회가 국회결의를 통한 사죄, 전쟁반대결의, 특별배상법 제정을 하도록 요구하며, 특별히 일본 내의 양심적인 시민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5. 북경 세계여성대회를 통해 세계에 일본의 비인도적 범죄를 알리고, 세계여성 운동과 연대한다.

6. 세계노동기구(ILO)가 '인신매매및 강제노동 금지'조항 위반을 들어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세계 각국 노동운동 단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7. 아시아 피해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에게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피해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며, 민간 운동을 지원하도록 요구한다.

8. 일본정부의 '민간위로기금안'을 반대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위하여 창조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하기로 한다.

1995년 2월 28일

제 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참가자 일동

인권 자료실	
일련번호	사료번호
827	82

타이완의 일본군'위안부'들은 정의를 원한다.

Yu-Fang Shiau

우리는 “위로금”을 반대한다.

우리는 '민간기금'과 '위로금'의 계획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본군'위안부'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일본정부가 몇차례에 걸쳐 일본군'위안부'들에게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것이 진실하고 뉘우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는 이 계획이 일본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전범국'이라는 낙인을 피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민간기금'을 이용함으로써 일본정부는 일본이 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정부가 2차 대전중에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역에 대규모로 성노예제도를 설립하고, 운영했던 것이다. 이 전범국이 희생자들에게 배상을 하지 않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대신에 일본은 살아있는 희생자들에게 자비로운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적은 양의 '위로금'을 주려고 하고 있다.

희생자들이 바라는 것은 일본정부에게 정의와 존엄을 되돌려 받는 것이다. 그들은 일본정부에게 돈을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다. 타이완의 일본군'위안부'들은 '위로금'을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는 '위로금'을 반대하는가?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은 일본정부가 행한 체계적인 범죄이다. 그 범죄의 성격은 강제성노예화와 체계적 강간이다. 그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전쟁범죄 및 어린이와 여성의 매매금지법의 위반이다. 이 여성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욕당하고, 전쟁에서 죽기도 했다. 그들의 삶은 이 모욕이 있는 후 전적으로 달라졌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법에 따라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 이 여성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이 여성들에게 범죄의 심각함과 성격에 따라 정당한 배상을 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올바르게 해결될 수 없다.

정당한 배상은 이 여성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돈은 민간기금에서가 아니라, 정부로부터 나와야 한다. 배상은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책임이다. 이 여성들에 대한 배상은 물질적인 배상과 정신적인 배상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배상의 액수는 범죄의 성격과 파괴력에 맞게 충분히 높아야 한다. 타이완 일본군'위안부'들은 적어도 2000만엔을 넘는 배상액수를 요구해 왔다.

'위로금'과 '민간기금'의 계획은 절대로 정당한 배상이 아니다. 높고 병든 이 여성들은 필사적으로 정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의란 적어도 존엄의 회복, 일본정부로부터의 공식적 사과,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이 여성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포함해야 한다. 오랫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피해국의 여성들은 그들의 요구를 명백히 해 왔다.

'민간기금'안에서 일본정부는 그들이 2차 대전중 일본에 의해 징집된 군인들에게 배

46